

우리금융그룹

바이든 취임 100일간 주요 정책이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 04. 29.

- 취임 100일째(미국 시간 4.29일)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요 정책(예: 코로나 대용, 경기부양)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지난해 11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예상한 수준과 비교하면 대외정책(예: 對 중국 기술 견제) 은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었고 재정지출 규모가 당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증세 방안도 구체화
-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미국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2021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취임초 대비 커질 것으로 예상
 - 지난해 11월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을 최대 0.3%p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취임 100일간의 정책 이행 수준을 반영하면 한국 성장률 상향 요인이 최대 0.6%p로 확대(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전망모형(WQPM)을 활용하여 추정)
-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특히 중간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임
-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완만한 증세, 기후변화, 對中 기술 견제 등의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경제는이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
 -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상존하 기 때문에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전략을 도출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02-2173-0568), 이다은 선임연구원(02-2173-0578),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목 차

I. 바이든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	1
Ⅱ.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III. 종합평가와 시사점 ···································	6
[붙임 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공약 추진 현황	7

I. 바이든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 취임 100일째(미국 시간 4.29일)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요 정책(예: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 * AP통신은 4.28일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공약 60개를 완료 25개, 추진 중 32개, 미추진 3개로 분류
 - 지난해 11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예측한 수준¹⁾과 비교하면, 대외정책은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었고 재정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며 증세 방안도 구체화
 - * 바이든 행정부 100일 동안의 구체적인 공약 이행 내용은 [붙임1] 참조
 - ① [코로나 대응] 무료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검진 확대, 방역 강화(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의무화), 백신 접종 가속화를 통해 취임이전 대비 확진자·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킴
 - * 1차 목표였던 1억 회분 백신 접종을 3.18일에 달성한 이후 상향조정된 목표(취임 100 일 안에 2억 회분 접종)도 취임 92일만인 4.21일에 조기 완료
 - ② [경기부양] American Rescue Plan(1.9조 달러, 기승인), American Jobs Plan(향후 10년간 2.3조 달러, 추진 중), American Families Plan(1.8조 달러 발표)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 극복
 - * 3.31일 인프라 투자계획(10년간 2.3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인세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가계여건 개선 투자계획(1.8조 달러 규모의 교육·보육·의료를 포함하는 인적 인프라 투자, 개인소득세 인상)을 추가 공개
 - ③ [증세] 법인세 인상(21% → 28%, 추진 중),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강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기부양 재원을 확보
 - *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 당의 반대로 25% 인상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언
 - * 고소득자(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기존 20%에서 39.6%(투자 소득세 3.8% 포함시 43.4%)로 인상할 계획
 - ④ [대외정책]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회복

¹⁾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21.11.25 일 발간) 참고

- * 1.20일 WHO,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2.18일 이란핵협정(2015년) 복구 의사를 선언하고 4.6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 이란과 논의를 개시
- 중국과의 통상 문제는 관세부과나 수출통제보다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 동·지적재산권 등을 연계하고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
 - *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부품 공급망, 첨단기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4.12일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인텔 등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CEO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반도체 헤게모니 탈환'을 선언하는 동시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할 방침을 강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 평가

	항목	이행		항목	이행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행정 조치	0	주거	주거의 권리화를 위한 노력	Х
기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0		이민 관련 법안 의회 제출	0
	수소불화탄소 억제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지지	0		국외 추방 기준 수정	0
	세계기후정상회의 소집	0		이산 이민 가족 재결합을 위한 조치	0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Δ		여행금지조치 해제	0
	2030년까지 미국내 30% 수자원 보존을 위한 조치	Δ		특정 집단 국외 추방 중지	0
	해운, 항공 산업의 배기가스 감축 약속	Δ		국경 장벽 건설 중지	0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연장	0		이민자들에 대한 'public charge' 규칙 취소	0
74 TII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0		이민 관련기관 교육 및 신뢰도 증진	Δ
경제 /조세	주요 핵심분야 공급망 점검	0		미군 복무 이민자 국외 추방으로부터 보호	
/포세	'Buy American'을 위한 추가조치	0		귀화 절차 간소화	
	법인세 인상	Δ		이민자 지원 위한 Task Force 재운영	
	공직자 윤리 강화	0		망명 절차 개혁	Δ
정부	정치권과 법무부 간의 분리	0		망명자를 위한 지원 강화	Δ
	공공기관 노조 규제 완화	0		이민자 구금 연장 종료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약화·철폐된 규율·원칙 복원	Δ		취약 이민자를 위한 '임시 보호 조치' 재검토	
-	총기규제 법안 의회 제출	Δ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표 소집	Δ
총기	'Violence Against Women Act' 재승인	Δ	불평등	노조 증권, 경제불평등 해소 위한 젅담조직 신설	0
규제	총기법 제정을 위한 조직개편 보고서 작성 지시	Δ		대학내 여성 폭력에 대한 트럼프 정책 취소	
	총기 구매 배경 조사 강화를 위한 FBI 보고서 주문	Х		미국 주요기관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제기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0		트렌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WHO 재가입	0		트렌스젠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지원	Δ
	백신센터 100곳 지원	0		형법 체계 개혁	
건강	백신 1억 회 접종	0		성소수자 인권 전담 특사 지정	
76	Mobile Vaccination Clinics 파견	0		정부 인종 및 성별 구성 다양화	
	의료보험 대상 확대	Δ		군(軍)내 성폭력 방지 위한 위원회 발족	
	新코로나 대응방안 마련	Δ		평등법(Equality Act) 서명	Δ
	초·중학교 대면 수업 재개	Δ		폭력 취약계층를 위한 프로그램 검토 지시	Δ
주거	주택 퇴거명령, 차압 중지	0]	경찰 감독 위원회 창설	Х
ナイ	홈리스(homeless)에 대한 정책 검토	Δ	국방	이란 핵 협상 재가입	Δ

주: ○ 완료, △ 추진중, × 미개시 자료: AP통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이를 반영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54%)이 전임 트럼프 (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이든 행정부의 순조로운 공약 이행에는 코로나·경제·일자리가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된 우선순위라는 점이 배경요인으로 작용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자료: 미국 주요 언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민주·공화당 정책 우선순위



자료: 노무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실물경제

- 지난해 11월 연구소가 예측한 수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미국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2021년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
 - 지난해 11월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을 0.1~0.3%p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취임 100일간의 정책 이행을 반영하여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 GDP 성장률 개선 요인도 0.4~0.6%p로 확대
 - * 202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IB평균 12월 4.4% → 3월 6.4%(+2.0%p) IMF 1월 5.1% → 4월 6.4%(+1.3%p)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전망모형(WOPM2)) 따르면 2021년 중 미국 GDP 성장률이

²⁾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하여 경제전망모형(WQPM: Woori Quarterly Projection Model) 의 개발을 2021.1월 완료하였으며, WOPM은 실물경제(예: GDP, 소비, 투자, 수출입)와 금융부문(예: 금리,

1.3~2.0%p 높아질 경우, 수출·설비투자 경로를 통해 국내 GDP 성장률이 0.4~0.6%p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

-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증대 시키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중장기적으 로 한국 수출(특히 중간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쌍순환(Dual Circulation) 정책을 추진 하고 있어 중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국산화될수록 對中 중간재 수출국(예: 한국, 일본, 독일)에 부정적 영향
 -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인수한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해당 중국기업의 미국시장과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조치 등을 취할 전망
 - * 쌍순환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예: 미중 무역 갈등)에 대응하여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방점을 두고 국내(내수)와 국제(수출) 양방향 순환이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중국의 중 장기 발전전략(예: 제조업 핵심 장비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2017년 배출량 709백만톤으로 1990년 293백만톤 대비 두 배 이상 증가)로 국제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9년)에서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순위(전체 61위 중 58위)
 -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한 바이든은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 세,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

2.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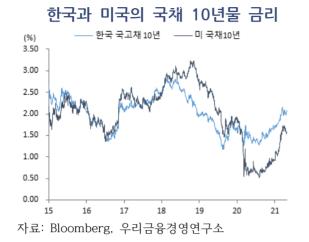
- 2021년 금융시장은 지난해 11월 예측했던 위험자산가격에 우호적 흐름(국채 금리 상승, 원화 강세, 주가 오름세)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
- ① 2021년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미 국채와 연동하여 완만하게 상승할 전

환율, 주가)의 유기적 동학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

망(2021년말 2.15% 예측)

-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로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점증
 - * 바이든 공약에 필요한 재정지출규모는 2021~24년 중 3.9조 달러 규모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은 1.4조 달러에 그쳐 향후 4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2.5조 달러로 추산
 - 다만, 여유노동공급여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고 연준의 국채매입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
-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경기 회복,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수급 부담, 상관관계가 높은 미 국채금리와의 동조화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
 - * 한·미 국채(10년) 금리간 상관계수(일간): 2015~2021년 0.779
- ② 2021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위안화 절상 흐름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예상(2021년말 1,110원 전망)
 -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금 리를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
 -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금리를 하회(원화 절하압력)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상대적 선전으로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금리를 상회(원화 절상압력)
 -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금융시장 개방에 힘입어 위안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와 동조성이 높은 원화에도 절상압력이 점증
 - * 위안화/원화간 상관계수(일간): 2015~2021년 0.591
- ③ 글로벌 경기 회복, 기업실적 개선, 주요국의 확장적(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수출·금융주를 중심으로 2021년에도 국내 주가지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2021년말 KOSPI 3,300 전망)
 - 미국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수출기업의 가중치가 높은 국내 주가지수에 긍정적
 - * 수출증가율과 KOSPI 변동률간 상관계수(월간): 2015~2021년 0.511
 - 달러화 약세 기조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증시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경기 회복, 시중금리 상승, 원화 강세는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CEIC,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I. 종합평가와 시사점

- 바이든 행정부 100일 동안 주요 경제공약 이행 규모는 지난해 11월 연구소가 예측한 범주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어 2021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취임 초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11월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을 최대 0.3%p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취임 100일간의 정책 이행 수준을 반영하면 한국 성장률 상향 요인이 최대 0.6%p로 추산
-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완만한 증

세, 기후 변화, 對中 기술 견제 등의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경제는 이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참여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미국과 한국이 CPTPP³⁾에 가입하면 글로벌 GDP의 40%,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되어 국내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 영향(예: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기대
-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특히 반도체)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
-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기회와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전략을 도출
 -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북미 경제권이 상당 기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의 최상위(예: 반도체 설계, 핵심부품 개발)에 위치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을 고려
 - * Financial Times(4.28일) 컬럼리스트인 Martin Wolf는 미국 기업들이 IT,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원동력은 미국의 경제자산(끊임없는 기술 혁신, 대규모 벤처캐피탈 투자, 자유시장체재, 우수인력유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라고 분석하고 국가주도 방식의 중국식 경제 모델로는 미국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³⁾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p):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전세계 GDP의 13%, 세계무역의 15% 차지)이 참여한 무역협정. 당초 미국이 포함된 TPP(12개국)를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하고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3월 11개국이 CPTPP에 공식 서명

붙임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공약 추진 현황

* 정책공약이 이행된 정도에 따라 기호(●, ●, ①, ○, ○, 검정 부분이 많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음)를 이용하여 평가(4.28일 기준)

I. 미국 국내 정책

1. 취임 초기

-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 확대, 휴직급여 지급,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 생산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급, 가계소득 등을 지원
 - (마스크 의무화)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주장
 - (평가: ●)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주(state) 외부로 여행하는 경우 마스 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을 발령(1월20일)
 - (검사·백신 투자) 드라이브스루 검사대를 2배 늘리고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키트와 백신 제조·유통에 투자
 - (평가: ●) 코로나 진단검사위원회(COVID-19 Pandemic Testing Board)를 설치,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민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백신 확보·보급 확대)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달성
 - (평가: ●) 1차 목표(취임 100일안에 백신 접종 1억회분)를 3.18일에, 이후 상 향조정된 목표(2억회분)를 4.21일에 조기달성
 - (일관된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얼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
 - (평가: ●) 정부 기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관한 질별통제예방센터(CDC)의 지 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공중보건 일자리와 재정) 10만 명의 공중보건 일자리,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의 검역관 수 확대
 - (평가: ●) 코로나 검사지원, 지역내 백신 접종센터 확대, 10만명 공중보건 인

력 고용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총 4,150억 달러를 추가 지원

- (대내외 공조) 미국 내 팬데믹 검사 위원회(Pandemic Testing Board) 설립, 세계보건안보팀 부활, WHO 재가입 등 국제공조 확대
 - (평가: ●) WHO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20일)
- (소외지역 기구 지원) 지역개발금융기구(CDFI)와 경제개발관리기구(EDA)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산층 일자리 창출, 소외지역 자금·시설지원 확대
 - (평가: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규정을 개정(1.22일)

2. 재임기간 중("Build Back Better" 정책)

가, 재정지출 확대

- 코로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
 - (평가: ●) 1.9조달러 대규모 경기부양안(American Rescue Plan)에 이어 2.3조 달러 인프라 투자(American Jobs Plan: 향후 10년간 2.3조달러)을 추 진중에 있으며, 4.28일 교육·육아 여건 개선 계획(American Familes Plan: 1.8조달러)을 추가 발표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프라(운송, 통신, 전력, 주택 등) 투자
 - (자동차) 100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 사용, 2030년 말까지 50만 대의 전기차 충전소 설립, 미국산 신형 버스 친환경화 목표
 - (평가: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인프라 투자계획의 7.7%, 1,740억 달러), 전기차 전환(4.5%, 1,0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기술(1.6%, 350억 달러) 등에 투자할 계획
 - (재생 에너지) 2035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없애고 2050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
 - (평가: ●)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하고 탄소배출 관련 이행 준수 메커니 음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또한, 석유·가스 업체에 대한 연방정부 토지 임대를 중단하고, 금융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제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담당 기구를 신설하고 규제를 강화
 - (평가: ●)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 기후감독위원회(SCC)를 신설. 청정에 너지 기준(CES, 발전), 평균연비제도(CACE, 운송), 신축건물 net-zero 에너지 기준 도입(건축)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

■ 미국산 제품의 구매와 투자 확대 강조(Buy American)

- (미국산 조달 확대) 조달법(Procurement Act)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에 4천억 달러의 필수재 구매 지시
 - (평가: ●) 연방정부 기관에서 물품 조달 시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우 선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1.25일)
- (혁신기술 투자 확대) 전기차, 경량 자재개발, 청정에너지 R&D(1,500억), 공 공 건강, 5G, 인공지능, 광역인프라 등에 3천억 달러 투자
 - (평가: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인프라 투자계획의 7.7%, 1,740억 달러), 전기차 전환(4.5%, 1,0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기술(1.6%, 350억 달러) 등에 투자할 계획

■ 미국 제조업 부흥(Made in All of America) 프로그램

- (미국내 생산 확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노력
 - (평가: ●) 2월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4.12일 화상 으로 글로벌 반도체·자동차·IT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對美 투자를 압박
- (리쇼어링) 오프쇼어링(미국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여 생산)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10% 세액 공제
 - (평가: ○)
- (필수재 공급망 관리) 세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위하여 필수 공급망 검토 (Critical Supply Chain Review)를 4년마다 시행
 - (평가: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일간 조사하도록 지시(2.24일)
- (통화정책 공조) FED와 협력하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중소기업 대출 시설을 설치, 전국의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 제공

- (평가: 〇)

나. 증세와 규제 강화

■ 독과점·금융규제 강화

- (반독점규제) 플랫폼 소유주이자 참여자인 대형 IT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 규제 강화
 - (평가: ●) FTC와 법무부는 아마존·애플에 대한 반독점 수사를 계속하는 한 편, 의회에서는 반독점 관련 주요 권고사항을 2022년까지 법제화할 예정
- (금융기관 규제) 금융기관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PE(Private Equity) 회사의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책임·규제를 강화
 - (평가: ○) 트럼프 前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금융 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시체계를 강화

■ 향후 4년간 1.6조달러 규모 증세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기존 21%에서 28%로 인상
 - (평가: ●) 법인세 최고세율 28% 인상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5% 인상 절충안으로 합의중에 있음
- (해외자회사 이익세율 인상)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의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global intangible low-tax income)
 - (평가: ○) 다국적기업의 국외 수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10.5%에서 21%로 인 상하기 위해 논의중
- (장부소득 세금 부과) 장부 소득(book income)과 과세소득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재무제표상 소득이 1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 세금 부과
 - (평가: ○)
- (부유세 확대) 연 소득 백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 양도세 배당세율에 소득세율 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대 세율은 약 두 배가 될 전망(23.8%→43.4%)
 - (평가: ●) 자본이득세를 기존 20%에서 39.6%(투자소득세 3.8% 포함시

43.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 (세금공제 축소)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규모를 감소
 - (평가: ○)

다.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불균형 축소

■ 노동자 권리 강화

- (노동자 조직화 지원) 간헐적 파업을 허가하고 조직화에 대한 보복을 금지
 - (평가: ○) 성명을 통해 단결권보호법안(PRO Act) 하원 통과를 권장(3.9일), 노조 증원 등을 지원하는 노조 전담반(TF) 창설 행정명령에 서명(4.26일)
- (고용유지정책) 연방정부 자금으로 해고보다는 고용 유지 장려
 - (평가: ●) 3.27일 CARES Act 통과로 근로공유프로그램(Work-sharing)을 실시하고 있는 주는 전액을 연방기금으로 지원하고 임시 채택 시 절반만 지원
 - * 근로공유프로그램(Work-sharing)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근로자 해고 대신 근로자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실업구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해고당한 자들에게 현금지급, 세금공제, 무이자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구제 실시
 - (평가: ●)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행정명령을 100일내에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1.22일),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 제공시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4.21일)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 (평가: ○)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을 위한 행정명령을 100일내에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1.22일)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안은 1.9조달러 경기 부양안에서 제외됨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

- (생애최초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신용대출 확대 최대 1만5천달러의 세금공제 혜택
 - (평가: ●) 하원 의원들이 최초주택구입자법안을 발의(4.26일)

- (저소득 혜택)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보조금 제공, 지역사회 개발블록 보조 금에 대한 자금 지원
 - (평가: ●) 저소득 주택자금 보조금 지원 대상 가구 확대(230만→250만), 임대 주택 건설, 지역사회 개발블록 보조금 등을 위한 90억달러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4.9일)

■ 의료보험정책(Affordable Care Act) 적용 범위 확장, 의약품 가격 인하

-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 보조금의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보험료를 하향 조정 (9.86%→8.5%)
 - (평가: ⑤) 2021.5.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을 무료 수준으로 제공할 전망
- (의료보험 대상확대) 공공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입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확대
 - (평가: ●)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에 서명(1.28일)
- (고령자 혜택) 근로장려금(EITC)을 고령 근로자로 확대하고 3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은 최소 빈곤 수준의 125% 혜택 수혜
 - (평가: ○)
- (의약품)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복제약 보급을 위한 공급망 확대 - (평가: ○)

- 교육격차 해소
 - (학비 감면) Community college의 등록금을 감면하고 가계소득이 12.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중산층 학생들에게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감면
 - (평가: ○) 상원 예산위원장과 진보의원총회 의장은 4.21일 전국민 대학교육 법안(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과 연소득 12.5만 달러 미만 가정의 4년제 공립대학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을 공식 상정
 - (학자금 대출)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 과 이자를 유예

- (평가: ●) 1.20일 1.5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2021.9.30일까지 연장
- (외국인) 이공계열 박사학위에 대한 비자 상한을 제거하고 불법체류 아동과 학생에게도 학비를 지원
 - (평가: ●) 전문직 대상 H-1B 비자 발급 제한이 3.31일부로 폐지

II. 미국 대외 정책

- 1. 미국 리더쉽 회복("Restore America Leadership"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협정에 재가입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쉽 회복에 노력
 - (국제기구·협정 재가입)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금 (UNHCR), 유엔인구기금 등의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란핵합의 (JCPOA)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핵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 실험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란핵합의(JCPOA),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중거리핵전력조약, 파리기후변화협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
 - (평가: ●) 1.20일 WHO,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2.18일 이란핵협정(2015년) 복구 의사를 공식 선언하고 4.6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 이란과 회담을 통해 논의를 개시
 -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악화된 관계를 회복
 - (평가: ●) 2.19일 바이든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NATO 동맹 재건 의지를 강조, 3.5일 EU-미국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대해 4개월 보복관세유예에 합의, 3.22일 바이든 대통령이 EU 27개국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

2. 한미·대북관계

■ 미국 민주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이나 주한 미군 철수·감축 없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입장

-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방위비로 13억 달러(전년대비 50%) 인상을 요구
- (평가: ●) 3.8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 타결
 - * 2020년은 2019년 수준에서 동결, 2021년은 전년대비 13.9% 인상, 2022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7~8%)에 연동키로 합의
-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 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재현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Top-down 방식으로 정상끼리의 만남을 선호한 반면, 바이 든은 전문가와 실무진의 협상을 더 중요시하는 Bottom-up 방식을 중시
 - * 2차 TV토론(10.15일)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핵 축소에 동의하여야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언급.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8.21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 배로 지칭하였으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
 - 전략적 인내 기조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난할 전망
 - (평가: ●)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2.3일)

■ 과거 이란 핵 협상때 사용했던 동맹국 외교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할 가능성

- 오바마 정권 말기에 체결된 이란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 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의 단계적 포기를 요구
 - * 이란핵협정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 EU가 이란을 상대로 체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2018년 협정에서 탈퇴
 - (평가: •) 3월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4.2일 한·미·일 안보 실장들이 워싱턴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재확 인하는 등 동맹국 외교전략을 개시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 책은 발표가 지연

3. 미·중 관계

■ 바이든은 중국에 관세부과나 수출통제를 통한 제재보다는 환경·반독점·반부패· 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무역과 연계하여 외교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전망

- * 바이든 후보는 미·중 무역협정 1단계 이행상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미국 통계기준 33.4%, 중국 통계기준 32.5%)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무역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
- 보호무역기조 유지, 리쇼어링 촉진,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등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하나, 현재의 관세부과와 수입통제는 미국 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
 - (평가: ○) 3.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 중국의 부당한 환율조작, 덤핑,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중국기업이 인수한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
 - (평가: ●)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이 발표 한 2021년 통상정책의제 중 하나로 선정, 구체적인 대응책은 계획단계
-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 인권 문제로 압박
 - (평가: ●) 3.17일 홍콩자치법 관련 24명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 3.22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관료 2명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

■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후보의 'Buy American Plan'은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세율 인상과 해외일자리 미국 내 이전시 세액공제를 통해 추진
 - * 바이든은 제조업 육성 계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 리를 미국에 되찾아오겠다고 주장
 - (평가: ●) 2.24일 4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내 정보통신서비스 공급망 보호를 위해 3.17일 중국 ICT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일부 기업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절차에 돌입
-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평가: ●) 3.22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 영국과 공동 성명을 발표, 4.16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를 명기하여 중국을 압박